사전 선거운동이냐 국회의원 통상활동이냐

민주 광주시장 경선 후보 이번엔 선거법 위반 논란

정동채 "예비후보 아닌데 선거운동" 수사 의뢰

강운태·이용섭 "국회의원 정책 밝히는 건 당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10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정동채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강운태·이용섭 의원의 불법·혼탁 선거 운동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광주시 선관위에 조사를, 광주경찰청에는 수사를 각각 의뢰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악용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시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확보한 두 의원 측의 불·탈법 선거운동 채증자료 등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 의뢰 내용은 두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공약성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또 선관위 신고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ARS 여론조사를 남발하고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에 해당된다며 이를 수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선거준비사무소를 3개월 넘게 운영하고 특정 산악회 등 사조직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행위도 각각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설치 금지)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이 만약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두 의원 뿐 아니라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주승용 의원 등 광역단체장 경선에 나선 현역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어떤 유권해석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을 모아 놓고 정책공약발표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불법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발표, 유사 사무실 설치 등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어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동채 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출마선언 1회에 한해서 인정하지만, 언론을 통해 정책발표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가 통상적인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짐작할 만한 사항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답변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운태 의원은 이날 정 후보의 수사의뢰에 대해 "국회의원이 기자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라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는 강 의원이 광주시장 경선을 위해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커녕, 구태에 불과한 마타도어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광주 시민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섭 의원 측은 "항상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 뒤 활동을 했었다"면서 "판단은 선관위에서 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자팔찌 소급입법안 통과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입법 적용과 부착기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시 후보경력 소개' 최대 쟁점

▪ 광주시장 후보경선 룰미팅

배심원제 참가단체 공개·당원전수 조사기관 이견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경선 세부 규칙 마련을 위한 후보 간 협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현재 후보 기탁금 규모와 경선 세부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공고를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3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간 첫 방송토론회를 실시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2일에는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후보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전에 경선 세부 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당 관계자들은 1~2일에는 경선 후보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선 룰 미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놓고 후보자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우선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 강운태 의원 측은 정치협약 단체와 회원 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동채 예비후보 측은 불법·혼탁 선거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당원전수조사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강운태 의원 측은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매출액 기준 상위 1~20위 업체로 하고 여론조사 전 과정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시스템에 따라 녹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아직 여론조사와 관련, 세부 규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여론조사 비용 때문에 매출액 대비 상위 10위권 내 여론조사 업체는 배제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후보 측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배제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룰미팅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여론조사 시 후보들의 경력 소개 부분.

민주당 중앙당은 그동안 여론조사 시 두 가지 경력을 20자 이내로 소개하도록 해왔기 때문이 이 방식이 적용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이용섭 의원 측에서 기존 유명 정치인의 이름에 기대 시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경력 소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광주·전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물 정치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으로 공정한 지지도 조사로 보기 힘들다"며 "예를 들면 '평민당 총재 비서실장'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 등 공식적이고 공공적인 명칭을 이용한 경력 소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동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당원 여론조사 시 당원 여부를 물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일부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어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시민공천배심원제 50%, 전당원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검찰 신문 거부

곽영욱 "한 전 총리가 직접 골프장 청탁"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지난달 3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준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제주도 골프빌리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한 전 총리가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냐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밝힐 때 언급했던 '용전의 효과'를 설명해보라고 주문하자 그는 "사기업에서 '용전의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상대가 생각하는 돈의 작으냐 많으냐에 관한 얘기"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상대가 10만달러를 생각하는데 5만달러를 주면 서운하게 느껴 효과가 없고 1만달러를 생각하는데 5만달러는 주면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니 고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냐"고 의미를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장은 또 2008~2009년 한 전 총리에게 제주도 골프 빌리지를 빌려줬으며 골프 비용을 일부 대납했지만, 그간 검찰이 이를 묻지 않았고 남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창피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골프빌리지를 예약해 달라는 전화를 한 전 총리로부터 직접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2009년 여름에도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빌려줬다고 증언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키로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정에서 격론을 벌였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한 전 총리는 31일 재판에서도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지만 법정에서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겠다"며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에만 대답하고 검찰 신문에는 불응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 하겠다는 취지냐"며 "형사소송법 296조의2에서 피고인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로 하게 돼 있으므로 검사가 신문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신문도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컨설팅
■ 매곡동 4층건물
- 건평 100평 / 대지 250평
(매매가 9억9천) 대출 9억
1억으로 인수 가능
(정형외과적합, 요양병원, 학원...)
■ 1만평 규모 토지
(풍암지구 수완지구 보유)
-골프 연습장, 대형교회, 법인학교 적합
• 원룸, 상가, 건축부지 급매물 또는 경매로 맞춰드립니다.
• 병원, 교회, 노인병원 부지 너무 좋은게 있습니다.
• 창고용지, 공장부지 시세 50%로 물건있습니다.
• 마트자리도 찾아드립니다.
• 경기가 안좋다보니 우량물건이 많이 있고 제 물건이 맘에 안들시 고객이 맘에 들때까지 찾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농성동 641-5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회사매각공고
◆ 위 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장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